

세계헌법재판동향 뉴스레터 제42호 소개

□ 헌법판례동향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소년사건의 경우 재판 지연기간의 상한(上限)을 더 낮추어야 하는지 여부> 사건은 캐나다 권리자유헌장상의 ‘적정 시일 내에 재판받을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R. v. Jordan 판결을 통하여 재판 심급별 지연기간의 추정적 상한을 제시하면서 재판 지연기간이 상한 내에 있는 한 적정한 것으로, 상한을 초과하면 부적정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15세로서, 소년사건의 경우 특별한 보호를 위해 일반적인 추정적 상한을 더 낮추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가가 문제되었으나, 연방대법원은 소년사건도 일반사건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의 <공항 환승구역에 장기간 억류된 난민신청자의 신체의 자유와 모멸적 대우 금지에 대한 권리> 사건은 각기 다른 나라에 망명신청을 하였다가 거부된 후 우연한 사정으로 러시아 세레메티예보 공항에 도착한 청구인들이 러시아에 망명신청을 하였으나, 짧게는 5개월에서 길게는 1년 9개월여 동안 공항 환승구역에 억류되어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들은 그 기간 동안 잠자고, 먹고, 씻을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나 의료적·사회적 지원 등을 전혀 제공받지 못하였는데, 유럽인권재판소는 이를 유럽인권협약상 신체의 자유 및 비인도적이거나 모멸적인 대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유럽연합 자연보호구역의 개발 가능성을 규정한 자치주법의 위헌성> 사건은 스페인의 자치주인 에스뜨레마두라에서 자치주법으로 유럽연합 차원의 자연보호구역인 ‘Natura 2000 구역’을 특정한 조건 하에

도시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관한 사건입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Natura 2000 구역’이 유럽연합법 및 국가법(norma estatal)에 의하여 특별히 보호되는 구역이며 위 법률들에서 도시화 개발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이를 자치주법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 제149 조상 국가의 배타적 권한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콜롬비아 헌법재판소의 <교도소 수감자의 교리(敎理) 준수 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종교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사건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청구인들이 믿는 종교의 교리 행위(특정한 머리모양과 채식주의 식단을 유지하고, 특정한 사진 액자를 소지해야 하는 등)를 교도소에서 금지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수감시설의 통제, 안전, 공공질서 및 공공위생을 목적으로 한 제한이더라도 비례심사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덜 제한할 수 있는 다른 대안적인 방법들이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세계헌법재판기관 소개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와 미얀마 헌법재판소를 소개하였습니다.

□ 세계헌법재판 관련법령

2018년 9월 23일자 최신 개정까지 반영한 스위스 연방헌법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제94조 이하를 실었으며, 스위스 연방헌법의 앞부분은 제41호 뉴스레터에 실렸던 스위스 연방헌법(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언론 속의 세계헌법재판 및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

2020년 2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언론 기사 속에 비친 세계헌법재판동향을 모아 놓았습니다. 세계헌법재판 관련 논문 목록에서는 최신 학회지에 실린 세계헌법관련 논문들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 국외통신원 소식

독일 통신원 소식으로 소개된 <‘업무상 자살방조’에 관한 독일 형법전 제 217조의 위헌성 논의 -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중심으로->는 업무상 타인의 자살을 방조하는 자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한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살펴본 글입니다. 연방헌법재판소는 위 조항이 죽음에 임박한 환자들을 수범자로 규율하진 않았지만, 위 조항으로 인하여 도움을 받아 자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환자의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으며, 더불어 자살조력을 제공하는 단체와 개인들의 직업의 자유도 침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연방헌법재판소는 자살조력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이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임에 따라, 독일 사회에서 입법론적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프랑스 통신원 소식으로 소개된 <프랑스 국립대학교의 비유럽권 외국인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합헌성 - 헌법재판소 2019년 10월 11일 n°2019-809 결정 분석을 통해->는 최근 프랑스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대학 등록금 인상 정책에 관하여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다만 심판대상조항은 등록금 인상을 직접 규정한 하위법령이 아니라 등록금 결정 및 징수에 대한 권한을 행정입법에 위임한 법률조항이었기 때문에,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조항 자체가 합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결정에서 교육의 무상원칙과 평등원칙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관련 부처에서 행정입법을 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헌법 원칙들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통신원 소식으로 소개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방지를 위한 일본정부의 긴급사태선언의 법적 근거와 효력>은 일본정부가 2020년 4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하여 발령한 긴급사태선언에 관하여 살펴본
글입니다. 일본 헌법에는 우리나라와 달리 국가긴급권에 관한 조항이 없으므
로 위 긴급사태선언은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 긴급사태선언의 요건과
효과를 살펴보고, 나아가 국가긴급권의 근거를 헌법에 신설하기 위한 개헌
논의의 문제점도 다루었습니다.